

**2024년부터
이렇게 달라집니다**

10

행정·안전·질서



1 법무부

자세한 내용은 p.369

중대범죄자 ‘머그샷’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

시행일: 2024년 1월 25일

Before

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.

신상공개 대상범죄	특정강력범죄, 성폭력범죄에 한정
신상공개 대상자	피의자에 한정
강제촬영 여부	동의없는 ‘머그샷’ 촬영 및 공개 불가



After

중상해·특수상해,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조직·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.

신상공개 대상범죄	특정강력범죄, 성폭력범죄 내란·외환죄 폭발물사용죄 원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·특수상해죄 아동대상성범죄 조직·마약범죄
신상공개 대상자	피의자 및 피고인
강제촬영 여부	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공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·보관 중인 사진·영상물 활용 가능 ‘머그샷’ 강제 촬영, 공개 가능



2 법무부

자세한 내용은 p.370

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

시행일: 2024년 1월 12일

Before

기존에는 스톱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.



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 부존재

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불비



After

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

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



3 해양수산부

자세한 내용은 p.376

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

시행일: 2024년 1월 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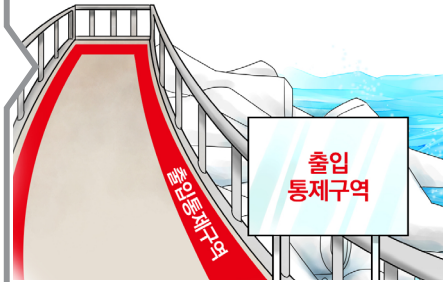
Before

그동안 항만시설 내 위험구역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.



After

앞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.



4 해양수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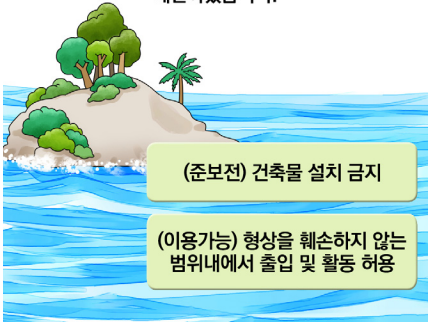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 p.377

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

시행일: 2024년 2월 17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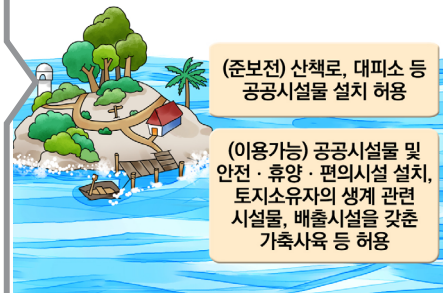
Before

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.



After

앞으로 무인도서 관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.



5 행정안전부

자세한 내용은 p.381

‘나 몰래 전입신고’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

시행일: 2024년 상반기

Before

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또는 전 세대주 중 한 명의 확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.



After

앞으로 ‘나 몰래 전입신고’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됩니다.

전입신고 시 전입자
확인 의무화

전입신고 시
신분확인 강화

주소변경 사실 통보
서비스 신설

전입세대확인서 개선



6 행정안전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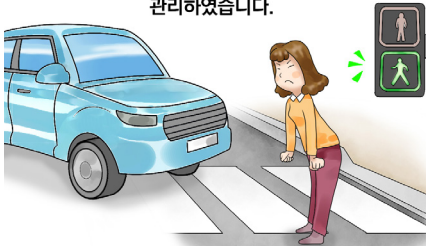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 p.382

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

시행일: 2024년 1분기

Before

지금까지 교통위반 신고는 행안부와, 경찰청에서 관리하였습니다.



행안부 ‘안전신문고’
경찰청 ‘스마트국민제보’

After

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는 행정안전부 ‘안전신문고’로 일원화됩니다.



* 타 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
처분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‘안전신문고’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7 법제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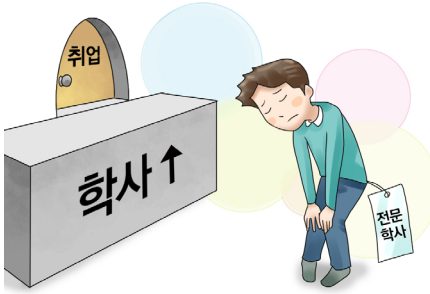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 p.385

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

시행일: 2023년 11월 21일

Before

종전에는 과도한 학력기준으로 인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


After

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기준이 완화됩니다.



8 국민권익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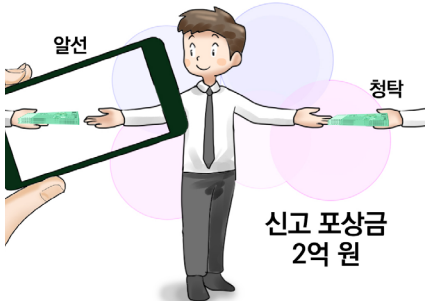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 p.410

공익신고·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

시행일: 2023년 12월 19일

Before

그동안 공익신고·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.



After

국민 누구나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상향됩니다.

